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특보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00-21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형규

www.newsunion.co.kr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얻었다.
잃은 것은 상식과 신뢰요, 얻은 것은 각성과 투쟁이다.
여기 지난 3년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반추한다.
부끄럽지만 불가피한 통과 의례다.
독자 앞에 벌거벗고 겸허하게 다시 서기 위함이다.

누구도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자기고백이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
새로운 역사는 항상 극심한 진통을 수반한다.
“과거에도 불공정과 편향은 항상 있었는데, 이 제와서 새삼스럽게...”
지금 이 순간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이다.

늦었다고 손 놓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이며 차이를 구별 않는 것은 비겁한 자기기만일뿐이다.

노조는 지난 기록을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 사례 집으로 묶을 계획이다.
조합원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것으로 믿는다.

‘한명숙 공판기사’..기본이 밟혔다

“연합에 ‘법조팀’ 기자가 있나?”
2010년 3월15일 연합뉴스 사회부 법조 기사에 난 데없이 ‘법조팀=’이라는 바이라인이 등장했다.
팀이름을 바이라인으로 쓸 때는 보통 공동 취재를 했거나 기획 기사를 함께 작성할 경우다.
하지만 ‘법조팀 기자’가 등장한 사정은 다르다.
내막은 이렇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사건 당시 전 총리)의 공판기사는 연합뉴스가 불공정 보도로 여론의 지탄을 받게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 대표는 총리재직 시절 광영옥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불구속 기소돼 2010년 초 재판을 받았다.
범죄의 수사과정은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단계인 탓에 아무래도(원칙상 그래서 안되지만) 수사기관의 주장이 많이 실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재판 단계의 기사는 다르다.
검찰도 재판의 한 당사자일 뿐이다. 유죄를 주장

하는 검찰과 무죄를 변론하는 피고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자리다.
기자는 기사를 다루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특히 한 대표 사건의 경우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였던 탓에 기사의 공정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하지만 연합뉴스의 한명숙 사건 공판기사는 공정성 측면에서 부끄러운 기록이다.
공판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검찰의 입맛대로 데스크가 기사에 넣는다거나 피고인(한 대표)을 유죄로 단정한 것 같은 기사가 연거푸 송고됐다.
이에 반발한 현장기자들은 “이런 왜곡 기사에 내 이름을 못 넣겠다”고 저항했다.
결국 2010년 3월15일부터 한 대표 공판기사는 정체를 ‘법조팀’으로 기사가 송고됐다.
이것이 법조팀 기자의 탄생 배경이다.
한 대표 측 변호인은 “연합 기사는 믿을 수 없다.



연합기사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어떤 기사가 송고됐는지 대표적인 기사 몇 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파사현정(破邪顯正)..한 전 총리에 ‘중형’ 구형〉(2009.4.2)

=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구형 시 의견진술에서 ‘파사현정’이라고 주장했다.

데스크가 이 사자성어를 제목에 쓰고 싶었다면 검찰의 입에서 나온 것이므로 직접 인용부호를 써야 했다.

본 기사는 파사현정의 뜻을 친절히 풀면서 피고인은 ‘사’이고 검찰은 ‘정’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연합이 ‘사’로 규정한 한 대표는 현재 2심까지 무죄를 받았다.

사측도 지난달 노사 편집위원회에서 ‘잘못된 데스크’를 인정했다.

나는 꼽사리다

연합뉴스는 이미 이렇게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팟캐스트가 이념적인편향성이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회당 다운로드 수가 200만회가 넘는 유명 팟캐스트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나는 꼽사리다 2회(작년 11월30일, 한미FTA 통과 직후)
〈실제 방송을 들으려면 13분30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선대인 : 저는 황당하게 뭐냐면 한미 FTA 통과되자마자 연합뉴스발로 미리 준비를 해둔것 같아요. 어떤 기사가 나가나하면 ‘무역 대국으로 나아가는 길’ 한국 경제의 재도약의 단초 이런 식의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그게 다음 포털에 볼드(굵은글씨)로 해서 걸려

있다니까.
-김미화 : 마치 양날개를 단듯이.
-선대인 : 그리고 내용 자체도 수출 얼마냐 는다. 일자리 얼마냐 는다, 불필요한 규제 제도 시스템 개혁한다, 금방이라도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점을 날릴 만병통치약 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김용민 : 다음정부에서 연합뉴스 보조금 다 끊어야돼
-출연자 일동 : (웃음)
-선대인 : 뭐 끊는 정도가 아니죠
-김용민 : 지금 MB 정부 들어서 가장 양아치적인 기사를 쓴데가 연합뉴스라고 생각해.
-선대인 : 아니 이건 딱 준비돼 있는 기사고 다음 포털도 아무 생각이 없지. 이게 진짜 유례없는 비공개 날치기 통과를 했는데 언론으로서 비판하지는 못할망정 완전 찬양일변도의 그런 기사를 쓰고 있다고.
-김미화 : (노래) you are not alone(언론).

“4대강 한쪽만 너무 깊이, 그리고 많이 팠다”

지난 2009년 10월 7일 발행된 연합뉴스 공정보도 위원회의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특집 기사에 대해 “한쪽만 너무 깊이 팠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해 10월로 예정된 이 사업의 개시를 앞두고 9월 14일 오후 출고된 기획기사 8건을 두고 한 혹평이다.

당시 이 특집은 전체 타이틀과 각 기사의 제목만 일견해도 편향의 극치를 달렸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사업을 장밋빛으로 묘사하는데 치우쳤다. 또 환경 파괴 논란을 일부 터치하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를 선전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해당 기획기사들의 제목을 훑어보자.

▲2009년09월 <맞올린 4대강> 특집

= ①한강이 다시 숨신다 ②수달과 하기 함께 살 남한강 ③금강 살려 백제문화도 복원 ④금강 맑게 해 새만금 살린다 ⑤영산강, 새로운 ‘젓줄’ 될까 ⑥경북 낙동강 ‘친환경수계’ 변신 ⑦경남권 낙동강, 홍수 끝낸다 ⑧서부산 낙동강 친수공간 기대

이 특집은 또한 균형없는 장문의 편집자 주로 연합뉴스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이런 편집자 주는 연합뉴스 기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편집자 주를 다시 읽어보자.

※편집자 주: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내달 10월에 드디어 희망찬 뜻을 활짝 펼칩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이 사업이 장차 국토의 ‘젓줄’인 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낙후한 강 주변 지역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일 뿐’이라는 평가절하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국토해양부 집행예산만 16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무엇보다 부족한 물을 확보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 등 자연 재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 수질을 개선해 항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자연생태를 복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것도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아울러 되살아난 4대 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시스템을 전면재편해 지속적 발전의 주춧돌을 놓겠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환경 개선과 수자원 확보, 홍수피해 방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의 ‘일석오조(一石五鳥)’효과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대한 포부입니다.

정부가 2012년까지 끝낸다고 공언한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이 사업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감으로 들떠 있으면서도 일말의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출범에 맞춰 이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와 사업 완료 후 변화상, 그리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 등을 8건의 특집기사로 살펴 봤습니다.(여기가 끝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이 사업에 닿아있는 시리즈를 먼저 출고했다. 이들 기사 역시 제목에서부터 중앙 지방정부의 청사진을 소개하는 데에 과도하게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09월 <경기도 강변살자> 특집

= ①한강이 다시 숨신다 ②변영으로 가는 관문 ③강물따라 흐르는 ‘여유’ ④품격있는 휴식처 북한강 ⑤한강물 2천500만의 생명수 ⑥자전거로 떠나는 한강 천릿길 ⑦꿈 실현 나설 때

연합뉴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4대강을 다시한번 조명한다. ‘긴급진단’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2010년05월 <긴급진단:4대강> 특집

= ①4대강 살리기는 어떤 사업 ②보 설치와 준설

어떻게 ③4대강 적기 정비 불가피 ④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했나 ⑤환경오염 누구 말이 맞나 ⑥4대강 공개토론회 열려야 ⑦차윤정 부본부장 인터뷰 ⑧반대 교수 모임 위원장 인터뷰 ⑨<표> 4대강 주요 쟁점들

①번 기사에는 “※편집자 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주요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와 환경 영향 등을 놓고 차분하고 논리적인 논의의 장은 펼쳐지지 않은 채 정부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정반대로 맞서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상황, 쟁점 등을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라는 편집자 주를 엿었다. 많이 짧아졌다.

하지만 이 편집자 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특집은 당시 야당이 정부여당의 4대강 사업을 거세게 비판한데서 급조된 기획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곧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 사업의 진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기사로 이해되기에 충분했다.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상대적으로 열독률이 높은 ①~③은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너무 친절하게 안내만 하고 있다.

‘잘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흔들림없이 진척돼야 할 것이라는 ‘당위’를 전하는 느낌의 특집이 또 출고됐다. 불과 2개월여만에 똑같은 주제로 기획기사들을 내놓은 것이다.

▲2010년08월 <4대강 지금은> 특집

= ①어디까지 왔나 ②한강살리기 사업 순항 ③강사업 주민인식 호전 ④뜨거운 감자 낙동강 사업



‘낮뜨거운’ 임기반환점 특집

연합뉴스는 2010년 8월22일 이명박정부 출범 2년6개월을 맞아 <이명박정부 반환점>이라는 슬로그를 내걸고 15건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먼저 제목을 살펴보자.

①진보10년과 MB정부 2.5년 ②도전과 응전의 정치 ③공직사회 변화열풍 예고 ④파워엘리트 변화 ⑤경제성장 발판 마련 ⑥G20로 국제무대 중심도약 ⑦4대강 논란속 순항 ⑧문화격차 해소 주력 ⑨법질서 확립-비리 척결 ⑩달라진 노동계 ⑪교육개혁 ‘자율과 경쟁’ ⑫글로벌외교·남북관계 ⑬정치권의 평가와 주문 ⑭美中日 전문가 평가 ⑮주요 발언론

분량 자체가 과도하다는 느낌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 8월22일 송고된 임기반환점 기사는 5쪽이었다. 국민의 정부 때는 7건의 기사가 송고됐다. 쪽지 수는 국정의 전반을 평가하자는 선의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제목만 보면 마치 한국사회는 2008년말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국내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듯한 평온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한 네티즌은 당시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따로 없는 훌륭한 나라”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내용에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각 기사는 이명박

정부의 잘한 점, 못한 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내용상 균형을 잃어 ‘친(親)정부적’이라는 비판을 벗어난 건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기사의 특정 부분만을 딱 잘라낼 경우 발생할 오해의 소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좀 과도했다고 느껴지는 문장을 적시해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파고를 특유의 현장경제 경험과 배수의 진을 친 전력투구...”,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끝모를 나락으로 빠질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 비상정부를 선포하고 과감하고도 신속한 정책 결단을 내림으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수렁에서 탈출한 국가로 만들었다.”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초래해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해 사정의 칼을 빼들었고, 덕분에 오랫동안



숨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음에도 근절하지 못했던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파헤쳐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정부가 법과 원칙, 노사갈등의 자율해결 기조를 견지하면서 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붉은 머리띠’, ‘삭발’ 등 갈등으로 점철된 노동계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결국 ‘철밥통’ 공무원 사회에서 전문성과 경쟁이 한층 강조되면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는 공무원들은 더 이상 설 땅을 찾기 힘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문장에 토를 달진 않겠다. 각

자 느끼면 될 일이다.

미디어오늘은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거의 전하지 않고 일방적인 찬사와 미화로 용비어천가라는 빈축을 살 정도였다”고 혹평했다.

이 특집은 그해 12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개최한 ‘국민세금 받는 연합뉴스, 과연 공정한가’라는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기사 사례로 난도질 당했다.

공정보도를 지키기 위해 노사 간 마련된 편집위원회에 노조측 대표가 2010년 9월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도 이 기사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 1면에 이어

▲검 “곽영욱 진술 신뢰성 확인후 조사착수” (2010.3.15)

= 법조팀 기자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 기사다. ‘한명숙 수사’가 서울시장 선거에 임박해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이 주문한 기사로 보인다.

돈을 줬다는 곽영욱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여러 합리적인 정황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준 것이었다.

데스크는 현장기자의 기사를 1시간 넘게 고친 끝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공판기사에 섞는 오류를 범했다.

이 기사로 현장기자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한 동안 ‘법조팀 기자’가 등장한 것이다.

타사 기자들은 “연합 기사에는 공판에서 안나온 말도 섞여 있어 믿기 어렵다”며 강한 불신을 보였다.

▲“곽영욱, 한명숙에 1천만원대 골프채 건네” (2010.1.26)

= 단독기사라고 소개됐다. 기사 출처가 ‘믿을만한 정관계 소식통들’로 돼 있다.

한 대표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받았다는 내용이 믿을만한 정관계 소식통들에 의해 확인됐다는 투다.

그러나 이런 소스와는 별개로 검찰은 추후 이 골프채 수수 내용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만큼 검찰 자신도 공소장에 넣을 만큼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공판 도중 피고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여론재판으로 몰고가려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도 확신 못하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곤 한다. 그러고선 ‘취재원은 숨겨달라’는 요구도 한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사실을 왜 검찰이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의심하며 끝까지 팩트파인딩해야 마땅할 것이다.

나중에 밝혀진 내용은 한 대표가 모자 하나를 집어 들고 나온 것으로 흐지부지 돼 버렸다.

▲한명숙 피고인 신문도 거부. 재판파행 (2010.3.31)

=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재판 파행이라는 딱지를 일방적으로 붙일 수는 없을 것이다. 파행이란 제목을 붙이려면 적어도 방청객의 난동

과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로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아닐까.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파행으로 볼 수 없다.

이밖에 당시 비판을 받았던 공판 기사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한 전총리 제부와 골프했다는 얘기 들었다”
- ▲검 “한명숙 제주서 3차례 골프”...증거제출
- ▲“한명숙 곽영욱 회원권으로 골프”..증거공방
- ▲검 “한명숙 그린피 미리 계산된 거 아니다”
- ▲정세균 “한명숙 결백하다고 생각”->정세균 “오찬에 곽영욱 오는줄 몰랐다”
- ▲한명숙 경호팀장 “친밀한 손님 밀착경호 안해”
- ▲곽영욱 “한 전총리 직접 전화해 골프장 부탁”

공판 과정에선 감춰진 다양한 팩트와 공소사실, 증거가 제출된다. 그 가운데 제목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기자의 판단이지만 하나같이 피고인을 유죄로 확신하게 하는 듯한 제목으로 송고됐다.

그 사이 연합뉴스의 기사 중립성과 공정보도는 허물어지고 있던 셈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율 올라가길 바랐나

2011년 8월24일은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놓고 서울시민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날이다. 당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는 주민투표 찬반 결과 못지 않게 투표율이었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무상급식 반대측은 투표율을 높이려고, 찬성 측은 투표율을 33.3% 아래로 낮추기 위해 불참 운동을 벌였다.

이런 시각에서 연합뉴스가 투표일 당일 송고한 몇몇 기사를 점검해보자.

▲〈주민투표〉 초반 투표율 강세…‘1020’주목 = 오전 9시46분송고

여기서 ‘1020’은 투표율 33.3%를 채우려면 오전 10시까지 투표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무상급식 반대파들이 내세운 근거였다.

당시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은 6.6%였다. 오전 10시까지 투표율 20%를 채우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였다. 그런데 연합뉴스는 오전 9시46분 송고한 기사에서 ‘초반 투표율 강세’라고 쓰고, 오전 10시를 불과 14분 남겨둔 시점임에도 ‘1020 주목’이라는 표현마저 서슴지 않았다. 마치 투표율 20%를 달성하길 간절히 바란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닌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1020’ 달성 여부 촉각〉= 오전 10시25분송고

이미 오전 10시를 넘겨 송고된 기사다. 투표율 20% 달성이 물건너간 시점임에도 기사의 제목에는 ‘1020 달성여부 촉각’이라는 표현이 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주민투표〉 與, 투표율 33.3%목표 벽 부딪혀 (종합) = 오후 4시54분송고

▲〈주민투표〉 투표율 저조 소식에 발길 늘어나 (종합) = 오후 4시54분송고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에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각각 송고된 기사인데 제목이 너무나 다르다. 한 쪽은 33.3%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싣고 있지만 다른 기사는 마치 투표율 달성이 무난할 것처럼 느껴진다. 당일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은 20.8%였다.

두번째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도 있다.



“투표율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이번 주민투표는 이날 시종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됐다.”

“오후 들어선 예상밖으로 투표율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면서 투표함을 결국 열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냐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다소 늘어났다.”

당시 시점의 투표율은 무상급식 반대파 입장에서 보면 비상 상황이었다. 오후 들어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늘어났다고 했지만 기사 어디를 찾아봐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연합뉴스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팩트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기사다.

게다가 13분 후인 오후 5시7분에는 “〈주민투표〉 무산 가능성…참가운동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다. 조금 전만 해도 순조롭던 투표가 왜 13분만에 비상으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두 기사는 같은 부서에서 송고됐다.

▲〈주민투표로 힘 실린 ‘보편 복지’…논란 계속〉= 25일 오후 4시5분 송고

주민투표 무산 이후 보편적 복지가 힘을 얻게 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해설 기사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부분은 두 문장으로 처리한 반면 포퓰리즘 우려에 대해 대부분 지면을 할애했다.

“촛불집회 화면은 넣지마”

연합뉴스의 정권 편향은 뉴스Y로까지 번졌다. 뉴스Y의 뉴스에선 촛불집회 장면을 볼 수 없다. 최근 한미FTA가 정치권의 이슈가 돼 관련 리포트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한 리포트도 종종 제작한다.

하지만 영상편집팀에선 한결같이 “위에서 촛불집회 장면은 쓰지 말라고 했다”며 촛불집회 장면이 꼭 들어가야 할 장면도 다른 화면으로 채운다. 촛불집회 장면 금지는 편집팀에선 반드시 지켜야 할 불문율이다.

한 조합원은 “편집팀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자료영상은 쓰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른 장면을 써야하는데 마땅한 화면이 없다고 하소연 한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한미FTA 관련 리포트에서 반대여론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촛불집회 그림을 쓰면 안된다는 편집팀원의 말을 들었고 실제로 해당 장면을 쓰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지시가 내려온 계통이나 출발점이 된 ‘윗선’은 뚜렷하지 않다.

편집팀원은 연차가 낮은 비정규직 사원이 대부분이어서 이 지시를 거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박정찬 사장은 공정성을 해치는 이 지시를 한 출발점과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